

#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5408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2.

제안자 : 국토교통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	회부일	회의정보	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	2209651	맹성규 의원 등 14인	'25.04.09.	상정	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 8.21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('25.11.26)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	2211286	박용갑 의원 등 10인	'25.07.07.	상정	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 8.21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('25.11.26)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	2212598	김희정 의원 등 10인	'25.09.03.	상정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11.18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('25.11.26)

제43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2025. 12. 10.)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「국회법」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·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인가 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어 양도인의 지위 승계에 따라 양수인의 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이 인가 전에 양도하려는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또한,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은 운임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·양수 인가 시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제11항 신설).

나.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

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(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).

다.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·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9조의14제3호의2 신설).

라.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·요구 금지 의무 위반으로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94조제1항제3호의6 신설).

#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·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.

제49조의13의 제목 중 “요금”을 “요금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(이하 “가맹수수료”라 한다)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9조의14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의2.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

제94조제1항제3호의6을 제3호의7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6.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맹수수료의 수취·요구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의1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사업의 양도·양수 등) ① ~ ⑩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14조(사업의 양도·양수 등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 <u>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·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.</u>
제49조의13(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·요금) ① ~ ⑥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49조의13(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·요금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</u>

제49조의14(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)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,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·5. (생략)

제9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3의5. (생략)

<신설>

3의6. (생략)

전적 대가(이하 “가맹수수료”라 한다)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9조의14(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

4.·5. (현행과 같음)

제94조(과태료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의5. (현행과 같음)

3의6.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3의7. (현행 제3호의6과 같음)

4. · 5. (생 략)	4. ·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